

“서울시의회 21기 정책위원회, 최종 연구발표회 개최, 해단식과 함께 전체 공식일정 마무리!”



서울특별시의회 이상훈 정책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북2)은 지난 3일 개최된 4차 전체회의에서 소위원회별 최종 연구성과를 발표하고, 해단식을 진행하

여 한 해 동안 공식 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이날 행사는 최호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장과 이상훈 정책위원장을 비롯한 정

책위원 등이 참석하였으며, 감사패 전달과 최종 연구발표회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해단식에서는 최호정 의장이 참석한 위원들에게 적극적인 활동과 노고에 감사하는 감사패를 전달하였고, 정책위원회 위원들은 한 해 동안의 연구성과를 공유하고 정책 반영과 제도 개선에 필요한 후속 협력체계를 지속적으로 가동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한, 이날 연구발표회에서는 박명호 위원(동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의 ‘서울시 청소년의 의정·시정 참여 현황 분석 및 개선방안’, 전홍식 위원(숭실대학교 경영학부 교수)의 ‘서울시 AI 기반 행정 시민참여플랫폼 구축방안’, 윤종복 위원(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과 전홍식 위원이 공동연구 제안한 ‘한옥보존지구 주민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제안’, 서용석 위원(카이스

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의 ‘AI 기술의 급속한 확산에 따른 서울시 청년 실업 대응 방안 연구’, 석재왕 위원(건국대학교 안보재난학과 교수)의 ‘서울시 기반침하 현황분석과 도시 지하 안전관리 대응 방안 연구’ 등 총 5편의 연구발표가 진행되었다.

이상훈 정책위원장은 “이번 최종 연구발표회와 해단식은 연구의 완결이 아니라 실행의 출발점”이라며 “청소년과 청년, 시민과 지역이 함께 만드는 서울의 미래를 위해 의회가 든든한 다리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의회 21기 정책위원회는 지난 ‘25. 1. 9.자로 시의원 17명과 각계 전문가 13명 등 30명으로 위촉·구성하면서 정식으로 출범하여 ‘25.11.28 자로 임기를 종료하게 된다.

이장성 기자

인천시의회 정해권 의장

지방이 대한민국 발전의 주체로 나서야



“지방분권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시대적 과제이며, 지방이 국가 발전의 동반자가 아닌 주체로 나서야 한다.”

인천광역시의회(의장 정해권)는 5일 열린 ‘제305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해권 의장(국·연수구1)이 대표 발의한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 이양 및 지방분권 개헌 촉구 결의안’을 최종 의결했다.인천시의회는 본회의의 결 직후 본회의장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300만 인천시민의 뜻을 담은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 이양 및 지방분권 실현 촉구 결의문’을 낭독하며 지방이 주도하는 분권국가 실현 의지를 천명했다.

결의안을 발의한 정해권 의장은 “지방분권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시대적 과제”라며 “이제 지방이 국가 발전의 주체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권한과 기능이 지방으로 이양돼 진정한 자치와 책임이 가능하다”며 “재정·인력·조직이 함께 이양되는 구조적 분권이 이뤄져야 행정 효율성과 주민 만족도가 함께 높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의장은 또 “지방자치의 헌법적 기반이 선언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자치입법권·자치재정권·자치행정권

을 명문화하는 지방분권형 개헌을 통해 중앙집권적 행정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결의대회에서 인천시의회 의원들은 결의문을 통해 ▶특별지방행정기관의 단계적 지방 이양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을 통한 자치권 보장 ▶중앙정부 권한 집중 구조의 개선 등을 촉구했다. 또한, 의원들은 ‘지방분권은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균형 발전을 위한 국가적 과제이며, 주민이 체감하는 실질적 자치가 구현돼야 한다’는 메시지도 함께 전했다.

정해권 의장은 “이번 결의안은 인천시민의 자치와 분권에 대한 염원을 결집한 결과”라며 “인천시의회는 전국 지방의회와 연대해 지방이 주체가 되는 분권국가 실현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결의안은 대통령실과 국회,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인천광역시 등 관계 기관에 순차적으로 전달될 예정이다. 인천시의회는 앞으로도 중앙정부와 지속적으로 협력하며, 제도 개선과 헌법 개정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심하린 기자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급식관리지원센터의 지난 10년, 앞으로의 10년’입법정책토론회 개최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은 4일(화)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정경자 의원은 경기도의회 소회의실에서 「급식관리지원센터의 지난 10년, 앞으로의 10년」을 주제로 입법정책토론회

를 주관·주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도내 31개 시·군에서 모인 250여 명의 관계자와 현장 종사자들이 참석해 회의장을 가득 메웠으며, 급식관리지원센터의 지난 10년의

성과와 향후 정책적 방향을 놓고 뜨거운 논의가 이어졌다.

좌장을 맡은 정경자 의원은 “지난 3월 실무자협의회와의 정담회에서 ‘도의원을 직접 만난 게 처음’이라는 말을 들었다”며 “행정의 손길이 닿지 못한 현상이 많다는 사실을 절감했고, 오늘 토론회는 그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고 밝혔다.

이어 “급식관리지원센터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식생활 안전망으로 자리 잡았지만 그 헌신에 걸맞은 처우와 지원은 여전히 부족하다”며 “경기도의 운영비 부담은 10%에 불과하고, 2026년 예산이 삭감된다면 공공급식의 지속가능성이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경자 의원은 “처우개선, 운영 안정성, 재정구조 개선, 공공성 강화”를 향후

핵심과제로 제시하며 “오늘 토론회가 급식관리지원센터의 ‘두 번째 10년’을 준비하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개회사를 맡은 전윤숙 경기도 급식관리지원센터 실무자협의회 회장은 “센터는 지난 10년간 도민의 식탁을 지켜온 가장 가까운 기관이지만 국비·도비 구조가 불안정해 현장은 버티고 있다”며 “안전한 급식을 책임지는 사람들이 불안정한 구조 위에서 있는 현실은 공공급식의 품질과 지속가능성의 문제”라고 호소했다. 김영주 화성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부센터장은 “앞으로는 디지털 식습관 교육, 데이터 기반 영양관리 등으로 업무영역을 확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송민수 기자

고양시의회 킨텍스특위, 제7차 행정사무조사

고양특례시의회 킨텍스인사(감사)추천공정성강화를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지난 10월 31일 제7차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했다. 그러나 이날 조사에는 고양시장, 제2부시장, 공로연수 중인 전 서구청장, 자치행정국장, 자족도시실현국장 그리고 킨텍스의 임 감사 등 주요 증인들이 출석이 불출석하면서 특위는 조사 자체의 신뢰성과 진행 의지를 심각하게 저해받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특위 위원들은 “행정사무조사를 회피하는 반복적인 불출석은 시민의 알 권리를 외면하는 것이며, 조사 권한을 경시하는 태도”라며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특히 최영수 전 청장장의 경우, 불과 며칠 전 열린 킨텍스 제3전 시장 착공식에는 참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조사에는 지병을 이유로 불참한 점을 지적하며, 공무원으로서의 직무유기 및 직무태만으로 판단해 고발

조치를 예고했다.

이어진 조사에서는 킨텍스 임원 선임 과정에서의 경력·이력 검증 시스템의 미비점과 임원 차량 차고지 관리 문제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특위는 킨텍스가 후보자의 경력을 검증하는 데 있어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점을 지적하며, 공공기관의 인사에 대한 투명성 확보와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임 감사의 주요 경력 중 하나인 ‘안녕연구소’ 상임연구원 이력에 대한 논란이 지속됐다. 해당 연구소는 고유번호증만을 보유한 비영리 민간단체로, 임 감사는 이곳에서 급여를 받지 않았고, 연구원으로서의 실질적인 성과도 확인되지 않았다. 이에 특위 위원들은 해당 경력을 사실상 허위로 판단하고, 이를 근거로 선임된 감사직은 취소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송민수 기자

충남도의회 “친환경 냉매 전환 탄소중립의 출발점”

충남도의회가 탄소중립 실현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친환경 냉매 전환 및 히트펌프 고도화 지원’을 정부와 국회에 공식 요청했다.

도의회는 5일 본회의에서 구형서 의원(천안4·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친환경 냉매 전환을 통한 히트펌프 고도화 지원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은 불소계 냉매 감축과 천연냉매 전환을 위한 국가 전략과 로드맵 수립, 그리고 재정 지원과 안전성 검증·표준화 체계 강화를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히트펌프는 공기나 지하수 등 주변의 열을 이용해 냉난방을 구현하는 기술로, 재생에너지 전력을 활용해 무탄소 냉난방을 실현할 수 있는 핵심 탄소중립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현재 국내 냉난방 기기에는 여전히 지구온난화지수(GWP)가 높은 불소계 냉매가 사용되고 있어,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저해하고 국제 규제 강화 속에서 산업경쟁력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구형서 의원은 “히트펌프는 재생에너지와 결합하면 온실가스 배출 없는 냉난방이 가능하지만, 냉매가 전환되지 않으면 진정한 탄소중립은 불가능하다”며 “지금이라도 냉매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꿀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유럽연합(EU)은 암모니아, 이산화탄소, 프로판 등 저GWP 천연냉매 중심의 기술 전환을 이미 법제화했고, 「키갈리 개정의정서」에 따라 선진국들은 2036년까지 불소계 냉매를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있다”며, “우리도 국제 규제 흐름에 뒤처지지 않도록 국가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하고, 천연냉매 기술의 안전성 검증과 표준화, 재정 지원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충남도의회, ‘어선감척사업 제도개선’ 촉구

충남도의회가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과 어업인 생계 안정을 위한 제도 개선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도의회는 5일 열린 제36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편삼범 의원(보령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연근해어업 어선감척사업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편 의원은 “기후위기와 인구 구조 변화로 어촌과 수산업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정부가 1994년부터 추진해 온 어선감척사업이 여전히 예산 부족과 비현실적인 지원금 산정 기준으로 인해 현장에서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4년 기준 연근해어업 어획량이 전년 대비 11.6% 감소한 84만 1천톤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며 “인건비·유류비 상승·고령화·수익성 악화가 겹치면서 어업 현장은 이미 한계 상황에 놓여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편 의원은 “어선감척사업은 단순히 어선을 줄이는 구조조정이 아니라, 어업인의 생존 기반과 수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핵심 정책”이라며 “감척 예산 확대와 함께 어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보상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건의안은 ▲감척사업 예산의 대폭 확대 ▲폐업지원금 산정 및 평가기준의 현실화와 법령 개정 ▲어업인 전업지원 및 생활안정대책 강화 ▲폐업지원금 비과세 등 감척사후지원제도 보완 등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마지막으로 편 의원은 “충남도만 해도 감척을 신청한 어선의 3분의 1만 실제 지원을 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번 건의안이 어업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지속가능한 어업·어촌을 위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